紙上에서 誌上으로

*최근 올바른 이해 없이 만능인양 확산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하며 포식의 시대를 유인해 온 십중팔구의 관행농업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과 몹쓸 것인 양 고운눈길을 주지 않으려 한다. 불행한 현실이다. 이런 즈음에 친환경농업의 현 주소를 심도 있게 조명, 허와 실을 알게 해준 보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호부터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유기농 대해부」시리즈를 전재코자 한다. 친환경농업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고 얼마나 어려우며 유통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편집자 **註**〉.*

**- 홍 보 부 -**

# 친환경농산물이 의심받고 있다

## 공무원 1명이 500농가 맡아 '부실관리'

"큰 아이가 아토피라 철저하게 유기농 농산물만 고르죠. 하지만 값은 비싼데 진짜 유기농일까 항상 의심스럽긴 해요."(이진영씨 · 32 ·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공식품도 요즘은 유기농이나 100% 국산 농산물을 썼다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중소업체들 제품이라 믿음이 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정부가 먹을거리 관리를 제대로 하는 법이 없잖아요. 누가 유기농 인증을 주는지, 진짜 감시를 하긴 하는 건지 소비자들은 깜깜이죠, 뭐."(신상숙 씨 · 45 · 경기 일산시 대화동) "미국 LA에 살 때는 홀푸드마켓, 트레이더존스 등 유기농 마켓이 많이 있는데 일반 매장에 비해 고작 10~15% 정도 비싼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기농 매장들이 규모도 작은 데다 어찌나 비싼지…. 백화점 친환경 코너는 거의 2~3배 비싼 것 같아

요."(정예진 씨 · 36 ·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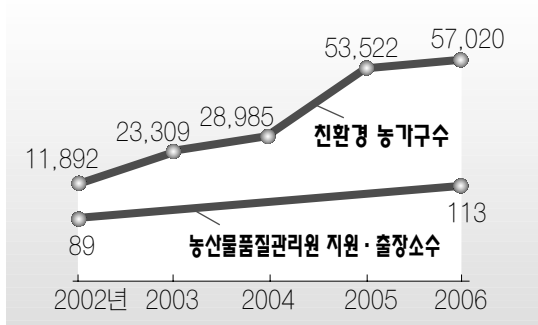
바야흐로 유기농 홍수 시대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친환경 농산물 코너가 없는 곳이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부유층이나 환경운동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친환경농산물을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사먹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기관인 AC닐슨에 의뢰해 실시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조사에서 95% 이상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지난 5년 새 무려 23배나 늘었다. 친환경 농산물 전문 취급 점포 수도 2001년 477개에서 올해 1000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친환경 제품의 생산 · 인증 · 유통 시스템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농가 생산과정 조사나 시판품 조사 등 사전 ·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올 1분기 기준 전국 친환경 농가 수는 모두 5만 7200개. 2000년(2448개)에 비해서는 무려 23배, 2003년(2만3309개)에 비해서도 2.5배 늘었다.

**친환경 농가구수 · 관리기관 증가 추이**




반면 현재 국내에서 인증 ·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국 출장소와 지원 등 113개와 23개 민간인증기관이 고작이다. 농관원 공무원 1인당 500개 이상 농가를 담당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전인증을 위해 1농가당 1인의 전담전문가가 붙고 25명 내외의 인증 전문가들이 공동작업을 한다. 유통매장의 유기농 제품을 임의로 수거해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위해 주정부가 동원하는 인원도 700명 이상이다. 생산 · 인증 · 유통 · 사후검증의 단계별로 총체적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수지 안맞는다" 완전 유기농 9%뿐

## 친환경농사 대부분이 저농약 · 무농약, 미국 등 선진국선 인정 안 해

"솔직히 친환경 농산물 분야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1명이 다 관할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농림부 관계자) 백화점 · 할인점에서도 친환경 매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동네마다 하루건너 하나 꼴로 다양한 브랜드를 내건 친환경 전문매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비싼 가격만큼 유기농 제품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다.

### ◆ 5년간 유기농가 23배 증가

전문가들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은 물론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관리할 전문 인증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체 친환경 농가의 60~70%에 대한 생산관리와 23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 친환경 생산물의 사후관리 등을 다 맡고 있다. 하지만 농관원의 출장소마다 친환경농산물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직 규모가 작다 보니 다른 업무를 겸임하거나 잡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5년간 친환경농업 농가가 23배 늘어나는 동안 농관원은 출장소 23개 추가에 그쳤다. 늘어난 출장소에 전담인력이 1명씩 배치됐다고 해도 불과 23명 증가한 셈. 현재 규정상 생산과정 조사는 분기당 한 차례, 시판품 조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돼 있다. 별도 제보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인증 및 사후관리 전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급기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농관원 관계자는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도 인증 뒤에는 농가의 양심을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농관원의 사후점검에 의한 고발과 인증취소, 정지 등의 행정조치 건수는 지난해 158건에 불과했다. 2004년 291건, 2003년 165건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친환경농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행정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다.

### ◆ 농약 안 치면 수지 안 맞아

"내가 아는 도시 사람이 할인점에서 유기농산물을 사먹는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쓸데없는 짓 한다' 며 말렸어. 그것(유기농산물)을 키우려면 농약, 화학비료 다 쳐. 정부 지원도 별 거 없는데 농약 비료까지 안 치면은 절대 수지가 맞을 수 없어. 우리 동네서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 전부 다."

전남 지역에서 친환경 과일을 재배하는 오모씨. 오씨는 "대한민국에서 유기농법을 제대로 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환경 농산물이 비싸게 팔린다고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농산물을 팔았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였다. 유기농법을 원론적으로 시행하면 생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오씨는 이어 "그러고도 유기농 인증받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다. "서류 내고 시간만 지나면 돼. 인증 받고 나면은 아무도 안 와. 어쩌다 적발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큰 탈 없이 넘어 가더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유기농법 기간 및 화학비료 사용량에 따라 4단계로 나눠져 있는 현행 친환경 농산

물 인증의 문제도 걸려 있다. 선진국은 유기농산물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저농약과 무농약은 친환경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98년 친환경농업법시행령을 선포하면서 농민들이 유기농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5년 유예기간을 두고 저농약과 무농약을 포함시켰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고 그나마 부족한 관리 인력이 더욱 모자라게 됐다. 농관원측은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이르면 내년부터 전환기 유기 등급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저농약 인증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저농약이나 무농약 농산물들이 유기농산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저농약 인증은 2002년 5000가구에서 2004년에는 1만5000가구를 넘겼고 지난해에는 3만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식품팀 최보규 차장은 "친환경농산물 매출은 해마다 15~20% 정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장도 연간 20%가량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부 인증 농산물만 취급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정한 23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매장들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 ◆ 친환경농산물 급증, 6년새 30배 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99년 2만6646 t 이었으나 2005년에는 약 30배 증가한 79만7747 t 에 달했다.

4가지 인증유형별 출하량 구성을 보면 99년에는 전환기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유기농산물 26.3%, 무농약 농산물 44.3%, 저농약 농산물 29.5%로 무농약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지난해에는 유기농산물 8.5%, 무농약 30.2%, 저농약 61.2%로 저농약 농산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장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저농약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 친환경 인증 최하위 단계인 저농약은 화학비료를 권장 사용량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도 급증세다.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99년 1306호에서 지난해 5만3478호로 매년 85.7%씩 증가했다. 인증 면적은 99년 875ha에서 지난해 4만9807ha로, 인증량은 99년 2만6646 t 에서 2005년 79만7747 t 으로 늘었다.

인증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99년 230ha에서 지난해 6095ha로, 무농약은 같은 기간 262ha에서 1만3803ha로, 저농약은 383ha에서 2만9909ha로 증가 면적 대부분을 저농약이 차지했다. 소량 다품종으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직거래가 활발한 편. 그러나 최근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유통 경로가 생겨나고 있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0%, 생산자조직은 30~35%, 한살림과 생협 등 소비자단체가 15~20%,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비중은 30~35%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소비(2005년 연출하량 기준)를 보면 곡류 9만2229 t , 과실류 28만8493 t , 채소류 32만5872 t , 특작류 7만3789 t , 기타 342 t 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실류 36.2%, 채소류 40.9%, 곡류 11.6%로 이들 세 종류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매일경제, 2006. 7. 4〉.